

대구-경북

손잡고 일자리 만든다

경제통합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구·경북이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고 오는 2010년까지 12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지방고용심의회는 2일 오후 대구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제1차 대구·경북 통합 고용심의회의를 갖는다.

각 광역자치단체 마다 지방고용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두 광역단체가 통합 심의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지방고용심의회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각각 대구·경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고용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경북 고용심의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대

■ 광역자치단체 전국 첫 통합고용심의회

연계통해 시너지 극대화 2010년까지 12만개 목표

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등 신규지원 사업 4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의 고용·인력정책 연계추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대구·경북지방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경북 실무·전문위원회' 통합 구성·운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 고용심의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와 도는 2010년까지 12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와 도는 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별(공단별)·업종별 현장 기술·기능인력 상시수급지원 시스템과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전직(재취업) 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인력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전

략과 고용·인력 정책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력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지방노동청도 기업 인력채용 비용 및 교육훈련비 지원(43만 명, 830억 원), 실업자 직업훈련,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2만4천 명, 500억 원), 미취업 청년 직장체험 및 대학·실업고취업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투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의 고용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지방 간의 연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이어 고용·인력정책도 힘을 합침으로써 두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